

칸느 G20 정상회의: 평가와 시사점

Lee Dong-hwi

Professor
IFANS

<요약>

그리스발(發)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Eurozone)의 경제상황 타개 문제가 지역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G20 정상회의가 11월 3~4일 양일간 프랑스 칸느(Cannes)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수년간 확대되어 온 G20에 대한 기대가 일정 수준 감소하였으나—즉 유용성 감소와 주도적 리더십 부재 양상을 보였지만,—그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Half Success)으로 평가된다.

G20의 유용성 감소

이번 칸느 정상회의는 그리스의 정정 혼란과 함께 유럽 국가 간의 이견, 미국의 경제난 지속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개입 주저 등으로 유로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상당 수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온 G20의 향후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게 되었다.

G20은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기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역할로부터 위기에방을 가능케 하는 상시적인 제도로의 진전을 상정(想定)하였다. 따라서 이번 칸느 회의에서 유로존의 위기에 대응하여 G20의 위기관리 기능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20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위기관리와 위기에방 양 차원에서 흠족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1) 유로존의 위기가 일차적으로 EU 국가들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유럽통합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치적 특성과 2) 위기의 파장은 세계적인 성격을 띄울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특성이 충돌하는 가운데에 G20이 놓이게 됨으로써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향후 G20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룬 점도 있다. 첫째, 서울 정상회의 시 합의된 사안들의 구체적 진전, 특히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다. 둘째, 사회 문제와 고용 문제를 세계화 시대 총체적 경제 문제의 주요 부분으로 조망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그 일부로 부각시켰다.

주도적 리더십 부재

이번 칸느 정상회의는 지난 5 차례의 정상회의에 비해 현격히 주도적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준 회의로 보인다.

2008 년 금융위기 시에는 당사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제 1 차 G20 워싱턴 회의에서 시작되어 제 4 차 G20 토론토 회의에 이를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1 년 제 5 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G7 국가들 외에 주최국으로서의 한국과 기타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노력이 추가되어 G20 의 발전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 시까지의 주요 참여국들의 노력은 G20 의 역할 확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관여’로 평가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번 칸느 정상회의에서의 각국의 태도는 자국 이익 중심의 ‘소극적인 회피’의 양태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1) 미국과 유럽 간, 2) 유럽 국가 간, 3) 미국과 중국 간의 세 차원에서 문제의 성격 규정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른 이해 상충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만이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합의를 통해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 의 역할 공고화에 합의한 것은 G20 외의 대안(代案)이 부재(不在)한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모색되어 갈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화의 진전

이번 칸느 회의를 통해 제도화의 관점에서는 상당 수준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G20 의 기본 성격을 비공식적(informal)인 것으로 재확인하면서도 트로이카가 실질적인 사무국의 역할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사무국 기능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회의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발전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차기 개최국 문제와 관련하여, 2015 년까지의 개최국을 명시하고, 2016 년부터는 지역 그룹의 바탕 위에서 순환적으로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G20 의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대표성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IMF 와 FSB 등 G20 을 제도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의 권능을 강화하거나 제도화의 정도를 높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G20 의 최상위성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G20 의 실질적 기능을 향상시키게 된 것은 G20 체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년까지 확정된 개최국들은 멕시코, 러시아, 호주와 터키로 비(非)G7 국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G7 선진국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G20 의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